전미광장



대유민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예비 사회인인 공업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기에 단칼에 거절했다. 학생 교육 은 오래 되어 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대부분 강 당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강의의 효과가 떨 어지기에 강당 교육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 다. 여러 번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락했지 만 마음은 무거웠다. 예상대로 강당이란다. 강 당 교육 50%는 이미 실패한 강의라고 말들 하

한국선 가해자 솜방망이

점검해 달라고 담당 교사에게 부탁도 했다.

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귀담아 들을 학생을 생

각해 강의 준비에 소홀할 수 없었다. 강의장을

체육관에 들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보니 짠한 마음이 들었다.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꽂았는데 빔이 켜지질 않아 방 송실 담당 학생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있는 빔을 켰다 껐다 해보길 여러 차례. 준비해 간 시청각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난감 했다. 그 와중에 가방을 메고 체육관에 막 들어 서는 학생 세 명을 불러 담당 교사는 단상 앞에 세워 놓고 약 90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

에세이

최원현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마땅한 처벌을

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이 학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이 형성 돼 사회로 발을 내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다. 누구를 탓하랴 자 책하며 강의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려는데 또 래들 보다 키가 작아 보이는 남학생 한 명이 다 가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왜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하죠? 미국은 100년, 200년 때리던 데요." 하는 것이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는 학생이 있었구나 생각하니 내심 기뻤다.

그 학생과 법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고 뒤돌 아 오는 길은 학생 교육을 수락했던 그 마음보 다, 준비 해 간 시청각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못 할 때 느꼈던 마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사건들에서 가해자들 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지난달 모 신문사에서 'n번방의 일반 인 가담자들' 1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결과에 서도 볼 수 있다. n 번방 일반 가담자 378명의 1 심 형량을 보면 무죄 2명(0.5%), 선고유예 4명 (1.1%), 벌금 64명(16.9%·평균 653만원), 실 형 47명(12.4%)이다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 69.1%(261 명)를 차지한다. 또 n번방 일반 가담자 378명의 범죄 유형을 보면 277명 (73.3%)이 소지죄에 해당하고 그중 205명 (74%)이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교내 성 폭력이 벌어졌던 서울지역 학교의 명단이 시민 단체 소송으로 3년 만에 공개 되었는데, 2018 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93개 학교로 가해 교사는 187 명이었다.

가해 행위는 학생들 신체 부위를 깨물거나 지점인 이유다.

만지는 등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경우, 입에 담 기 조차 어려운 언어적 성폭력을 일삼은 가해교 사 187명 중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 고한 교사는 151명에 달하지만 이중 63%인 96 명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현재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처 벌이 강화되고 사법부의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선고되는 처벌 이 너무 약하고 가볍다는 시각이 많은 것은 정 작 그 학생만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

실질적인 판례를 중시하고 판사의 권한과 재 량이 큰 교화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징역 100년, 200년도 선고가 가능 한 영미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의 형량을 기준 으로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고 형벌을 교화 목적 으로 주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다 보니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초범과 과실범에 대해서는 형 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하고 반성했다는 이 유, 합의했다는 이유 등의 감형사유를 존재하게 한다.

그러니 질문했던 남학생의 침울한 표정에서 도 느낄 수 있었듯이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법과 실제 집행 사이의 벽은 너무 높게 느껴지 는 건 당연한 것이다. 실형보다 집행유예 기간 이 더 길게 선고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범죄를 억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판사의 말도 일리는 있 겠으나, 감형사유가 결코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 시켜 줄 수는 없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내일



수필가·문학평론가·씨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사)한국문인협회 부이시장

전화가 왔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단다. 자전거 로 운동을 나갔나 본데 돌아오는 길에 넘어지면 서 오른쪽 다리가 네 군데나 골절되된 것이다. 이번 달엔 아내도 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당 장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니 모든 일이 중단 될 수밖에 없다. 아내만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닐 테니 내 모든 일정 또한 올 스톱 될 것이다.

당당하게 계획표 속에 들어있는 내일부터의 꽉 차 있는 이번 달 내 모든 일정을 다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고 보니 내 시간이란 당초에 없었 다. 신의 시간을 빌려 쓰는 주제에 그걸 마치 내 것인 양 조정하고 바꾸면서 시건방을 떨었다.

50대의 세계적인 배우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작가가 세상을 달리했다. 뿐아니라 내로라 하는 이들의 부고를 보면서 일을 당한 가족과 친지들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여 살 아있음에 대한 경이로움이 더욱 가슴 가득 밀려 온다. 그렇게 생명도 시간도 내 것일 수 없는데 어찌 내 계획을 세우며 무언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 순간만 그나마 내 시간이라 할 수 있을 뿐 다가올 시간도 계획도 예정도 내 것이란 없다. 하니 겸손하게 이 순간에만 최선

을 다하면서 감사할 일이다.

난 50살까지만 살겠다고 했었다. 어머니 아 버지가 다 서른 전에 돌아가셨으니 50이면 부모 님보다 엄청 많이 사는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50이 가까워지자 불안해졌다. 오십은 금방이었다. 그렇게 오십인가 했는데 어느새 거 기서도 20년이 지나 종심(從心)의 나이도 넘어 버렸다. 보내신 이가 당장 부른대도 그저 감사 해야 할 나이다. 그럼에도 가끔은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미래의 계획도 세우려 한다. 신이 보시면 참으로 가당찮고 한심하고 괘씸해 보이기도 하리라.

아내는 참 건강했다. 나는 아파서 여러 번 입 원도 하고 수술도 받았지만 아내는 아프지도 않 았고 그러니 한 번도 수술이나 입원도 없었다. 어쩌면 교만할 만큼 건강에 자신했을 수도 있 다. 그런데 병으로가 아니라 다쳐서 입원을 하 고 수술까지 받은 것이다. 더구나 큰일들을 앞 두고 말이다. 제발 까불지 말고 겸손하라는 신 의 경고일 것만 같다. 아내에게만 주는 경고이 기보단 내게도 주는 경고 같다. 그렇게 생각하 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기적이고 축복 이다. 내일 아니 한 시간 후도 내 시간이라 할 수 없는 오직 이 순간만이 그나마 내 시간이기 때문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 는 찬양곡이 있다. 오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내 일을 또 달라는 것 같아 더 염치가 없어진다. 나 에게 하루하루가 신의 선물이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 시도 결코 허투루 살 수가 없을 테고 말이다. 그러면 서도 또 새 아침을 기다리며 내일도 내 시간일 것이란 건방진 믿음을 갖는다. 그게 사람이고 나다. 어쩌면 그 내일을 모르기에 그나마 편안 히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곳간을 더 짓겠다는 부자에게 "오늘 밤 네 생 명을 거두리라"던 성서의 말씀이 아내의 사고 를 보는 내 마음을 종소리가 되어 깨운다. 제발 오늘이나 잘 살라는 신의 음성이다. 산다는 것 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신비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이다.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건 가 장 큰 기적이다. 그러고 보면 아내가 이만큼만 그리고 다리를 다친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이고 지금 다가 오고 있는 것이 내일이라지만 사람은 오늘만 산다. 오늘만이 가장 중요한 현재이지만 그래 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일이 오늘로 와줄 것 을 믿으며 산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내일이 오늘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내게 들려온 신 의 목소리인 아내의 치료부터 더 열심히 도와 야겠다.

익스트림 스포츠 안전사고 주의하자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익스트림 스포츠 가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부주 의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독지광장

익스트림 스포츠는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성 을 동반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러한 익스트릭 스포츠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오는 스릴감으로 인해 지루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특히 인기 를 끌고 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위험성이 동반하기 때문에 충분한 장비나 보호구를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스포츠 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비를 제대 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다 사고로 이 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한 익스트림 스포츠 문화를 위해서는 충 분한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일부 익스트림 스포츠의 경우 날씨의 영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도 뒷 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198	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 <mark>매일</mark> 200		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		표이사·발행인·편	[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경제부	(062) 720-1060 (062) 720-1067	문화체육부 사진부	(062) 720-1071 (062) 720-1040	월간국 사업국	(062) 720-1007 (062) 720-1011,1099	
사회부 사회2부	(062) 720-1050 (062) 720-1043	기획탐사부 편집부	(062) 720-1045~46 (062) 720-1073	광고국 관리국	(062) 720-1016~17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과주과연시 난구 처변자리	= 398 (사돈)	구도근 9	구도로 월 10 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2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전남 전략 짜야

2년 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 명 시대 지역의 공동 번영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행정 통합 또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 한 용역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민선 8기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 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15개 국정 과제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식화해 각 지역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 략 마련이 발등에 불이다.

이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미 부 울경(부산 울산 경남)은 특별지자체연합을 구성하기로 했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방 안을 수립하는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 다. 부산의 경우 금융 중심권 부상을 겨냥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 회등이전을희망하고있다. 또대구는한국 산업기술진흥원 등 1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 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은 공공기관 이전 시즌 2와 관 련해 공동 협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다. 광주 군공항과 민 간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이 점 철되면서 연대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탓 이 크다. 두지역이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나 주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방안에서 불협 화음을 내는 등 각론에선 현격한 입장 차이 를 보인다.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이든, 지역 통합 청사진이든 긴급 현안이 민선 8기로 넘 어오게 됐다. 공항 이전 문제가 얽혀 내부적 인 지혜와 역량 결집이 시급히 모아져야 할 때이지만 기대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영남지역이 새 정부 역점과제 와 궤를 같이하며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하는 광주와 전남의 입장에선 조바심이 난다. 아직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공공기관의 44%가 몰려 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폭적으로 지 방 이전을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을 철 저히 짜가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기대 크다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때, 희소식이 전해져 든든하다. 최 근 국회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 방자치단체가 자율·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 시군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전남도는 환영을 뜻을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총 36건이다. 주요 내용은 보 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 원, 교육은 유·초·중·고교 시설 및 교원 통 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 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 • 미 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다.

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 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 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행정안 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 결한데 본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 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곧 지방을 살리 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전남도 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 · 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 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 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전 남도, 활약을 기대한다.

호남 민심 잃은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

기지수첩



정치부 차장대우

길용현

이번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지역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거세 게 불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시장·군수 22 명 중 무소속 당선인은 목포 박홍률・순천 노관 규・광양 정인화・강진 강진원・영광 강종만・무 안 김산·진도 김희수 등 7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였던 전남에서 이번 무소속 돌풍은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쇄신과 변화를 천명했 으나 고무줄 잣대, 당원 명부 유출, 재심 신청 등 공천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새어 나오면서 공 천안에 반발한 현직 단체장 등 유력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공천에서 배제된 박홍률 목포시장 후 보,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 3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승남 위원장의 일방통행식 경선 방식으로 인해 경선 보이콧, 경선 무효, 재경선, 공천 취 소 등 각종 잡음이 새어 나오면서 반 민주 정서 가 확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 4곳 중 2곳의 군수가 민 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경선 파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 은 관리 부재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반 민주당 정서가 확산하 면서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선택한 경향이 높았 다"며 "당장 2년 뒤 총선에 나설 무소속 당선 지 역구 국회의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 고 분석했다.

선거 패배 후 민주당 전남도당은 입장문을 통 해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지역민의 뼈아픈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도민께서 들어주 신 회초리를 채찍 삼아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혁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다수의 경합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깃 발을 빼앗긴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 서 패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말로만 반성했던 민주당에 광주·전남 민심은 철퇴를 내렸다. 호남 민심을 잃은 민주당이 과 연 생존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뒤 총선에서는 더욱 참혹한 성적표를 받을지도 모 를 일이다.